

참여연구원 칼럼



통일교육, 무엇이 문제/과제인가?

이 수정 (덕성여자대학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통일'만큼 공식적 당위로서의 위상과 실재적 관심도 사이의 괴리가 큰 사회이슈도 흔치 않을 것이다. 통일은 공식적 차원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막상 사회구성원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 그 가능성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분단이 낳은 다양한 폐해를 인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염려한다. 그리고 분단현실이 기정사실화되는 흐름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통일교육 강화"를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 아래 "통일교육 활성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이든 사회통일교육이든 지금껏 통일교육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온 교육이 효과적인 것 같지 않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구성하는 통일교육도 정부의 특정 정책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급급한 (종종 '반통일적'인)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존하는 통일교육(들)의 문제점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족 통일'을 당위로 놓고 학습자들이 이를 내면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18년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분단을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으로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통일에 대한 정서적 열망이 높지 않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한 민족이 아닌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통일을 지상과제화하는 당위론적 교육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둘째, 많은 경우 통일교육은 교육의 대상자를 계몽 대상으로 상정하는 매우 고전적인 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된다. 이런 교육 방법은 제시된 당위나 통일 방법, 내용 등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게 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성찰 없는 학습은 재미없고, 재미 없는 학습은 효과가 없다.

셋째, 통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정권의 이념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변동성이 크고 편협하다. 정권이 지지하는 입장의 내용이 지배적일 경우 다른 입장의 내용이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진다. 이분법적 분단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 교육이 전형적으로 이분법적 분단문화에 갇힌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대안은 무엇일까? 흔히들 얘기하듯,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과 내용의 마련"일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적이자 통일의 파트너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근간을 이루는 가운데 사회의 다원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관련 이해관계 및 의견, 경험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쩌면 정부가 또 다른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 통일교육의 방향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당장 더디고 비효율적인 듯 보이지만, 다양성이 적극적으로 소통되도록 통일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 공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키워진 역량이 (정치적) 통일 이후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꼭/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분단/통일은 나와 우리 가족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상상하는 통일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민주주의와 통일, 평화와 통일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양한 화두를 만들며 토론하고 협상하기.

우리시대의 통일은 성찰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가며 만드는 탈근대의 구불구불한 길이다. 통일 교육은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비폭력적 대화와 성찰의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통일교육의 주도권에 대한 강박을 벗고, 통일담론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기획기사

지금 필요한 건 ‘분단 병’ 치유다

4·27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빨갱이’ ‘위장평화쇼’ 등 적대적 언어 멈춰야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북핵 위기 30년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될지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커진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군사력 증강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도 꺼냈다. ‘사회주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어서 향후 남북경협도 관심을 모은다.



<사진1>

정상회담 하루 앞둔 판문점 2018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될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주목을 끄는 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결정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화답해 모처럼 남북미 간 평화의 언어가 오고간다.

관계 개선의 문턱을 넘다가도 세 나라의 정책적 혼선으로 ‘합의-긴장’ 국면이 반복됐다는 역사적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이 같은 분위기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당장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 카드가 피어오르는 상황에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나온다.

그러나 분단 70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 파고든 ‘분단

병(病)’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사회 곳곳에는 군사적 대치뿐 아니라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억제와 강압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할 단어가 넘쳐흐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한의 핵동결선언에 대해 “칼든 강도가 칼은 숨기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은 칼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미 두 번에 걸친 체제 붕괴 위기에서 남북 위장평화쇼로 북을 살려준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다. 또다시 국제제재로 붕괴위기에 처하자 세번째 살려주려고 남북 위장평화쇼를 하는 것이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등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기획기사

식민지·한국전쟁으로 피해를진 ‘마음’

분단과 제국주의, 타자화 된 언어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낳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식민지와 한국전쟁은 남북의 적대를 강화시킨 원천이었다. 상호 적대성은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산되기에 충분했다.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빨갱이’ ‘위장 평화’ 등의 언어는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이 자리해 있다.

상호 적대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남북한은 오랫동안 반대자 탄압은 물론 국가주의적 동원과 통제를 발달시켰다. 일종의 ‘분단 트라우마’ 탓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부는 정권차원의 위기를 봉합하고, 폭력과 억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문사와 간첩조작, 고문 등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은 물론 일상적 삶에서 끊임없이 적을 호명했다. 1987년 민주사회로 진화되면서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크게 줄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과 국가 권력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장두석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은 일제부터 한국전쟁, 산업화로 형성된 한국인의 생활상을 이렇게 정리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산업사회로 달려가면서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인륜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역사는 제 몸통마저 다 빼앗기며 꺾이고 말았고, 민족정신도 황폐화되고 말았다. 산과 들은 멋대로 파헤쳐지고 오염되었으며, 강도 제 물길을 따라 흐르지 못하고 있다. 전통이 무너지고, 민족의 강토와 민중의 영혼이 병들고서 겨레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 - 2012년 6월 <프레시안> 인터뷰 중

장 이사장은 휴전선의 철조망을 시민의 자유로운 사고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봤다. 강대국의 놀음에 남북이 갈리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 전쟁까지 치른 우리 역사는 해방 70년을 향해 가는 오늘에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위협과 사회세력 간 대결 등 민중의 가장 큰 고통이 분단과 제국주의로부터 비롯되기에 분단 병이며, 제국주의 병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족 공통의 문화 개발해야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이병수 당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은 “분단 트라우마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처럼 남북 적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몇몇 소수자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반복되는 현재진행형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정권이 자의적으로 벌인 특정 사건뿐 아니라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사건처럼 남북 상호간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트라우마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실제 포탄 세례를 경험한 연평도 주민들 겪은 공포감과 죽은 병사 가족들의 절망,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의 불안감, 적을 몇 배로 응징해야 한다는 전쟁 불사의 이야기들, 나아가 남한 국민 전체가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생생히 작동하고 있다.

이병수 연구원은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온 남북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민족적 공통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특히 남한의 한국

학과 북한의 조선학은 단일 체제 속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문화와 철학과 역사학을 창출했고, 민족적 공통성을 위한 풍부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전향적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서 보듯 오로지 자신의 이데올로기만을 강요하는 현상은 분단이 우리의 무의식 구조에 뿌리박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북의 이념대립과 군사적 충돌로 분단 병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도처에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면서도 타자를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모순적 태도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알게 모르게 분단 병이 우리 삶을 지배해왔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비핵화’라는 숲에 매몰돼 분단으로 야기한 일상적인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본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상대의 허물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요즘, 70년 간 우리 사회가 앓은 ‘분단 병(病)’을 치유할 때다.

* 본 기사는 4월 26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기획기사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인식 어떻게 변했나

공동입장 등에 '우호적' 태도 많아... 2030세대 부정적 입장 해소는 '속제'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스포츠·문화 교류가 대북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년 가까이 암흑기에 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가 지난 19일 본교 대회의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한 통합인식' 좌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는 올림픽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해 스포츠·문화 교류를 통한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한 마음통합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북한 연구자를 비롯해 정부 부처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동입장과 단일팀 등 '우호적' 응답 높아



<사진1>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한 통합인식' 좌담회가 지난 19일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대표 발제자로 나선 이하연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심리학 박사)는 '남북한 스포츠·문화 교류와 남(북)한 주민 간 상호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회 기간 올림픽과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한 국민들의 변화된 대북인식을 알아본 연구다.

이 박사는 남북한 공동입장과 문화교류, 남북단일팀, 향후 남북한 스포츠교류, 남한사회 정체성 수준 등 8개 세부 항목을 놓고 응답자의 대(對) 북한 태도를 살폈다. 설문조사는 올림픽 폐막 사흘 뒤인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은 올림픽 소식은 물론 한반도 정세 진단과 대북특사 파견 등 대형 이슈가 줄줄이 쏟아져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기였다.

공동입장과 문화교류, 단일팀 등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한 스포츠·문화교류에 대한 태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그중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태도'가 평균 5.09로, 다른 항목에 견줘 가장 높았다.

눈 여겨 볼 점은 2030세대의 우호적 태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다.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화 논란에서 보듯 이 세대는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방침에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9일과 10일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보면, 남북단일팀 구성에 찬성하는 20대 응답자는 16.4%로 반대 82.2%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공정성 이슈가 젊은 세대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기획기사

특히 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단일팀 경기를 많이 시청했을수록 30대는 ‘단일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향후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어떤 뉴스 콘텐츠를 봤느냐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지만, 남북 간의 교류협력 경험이 거의 없는 세대가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접하더라도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태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에 비해 ‘연민’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값은 20대 4.27, 30대 4.61, 40대 5.03, 50대 4.82, 60대 4.70으

로 나왔다. 국민들은 북한 주민에 대해 ‘측은하고 안쓰럽게 여긴다’는 정서를 많이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태도 역시 남북 교류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 대해 이하연 박사는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운명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2030세대와 기성세대의 인식 차이를 보듯 구성원들의 역사적 경험과 남북 간 관계 인식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식, 포괄적 관심으로 확대돼야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과정에서 어떤 담론이 필요한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국가주도 정책결정은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풍성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반도기’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그만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하나의 정체성보다 공정성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담론들도 얽혀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이어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 응원단의 외모를 부각하거나, ‘평양올림픽’, ‘체제선전’ 등의 단어를 많이 썼다”며 “뉴스 콘텐츠가 전달되는 매체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다 입체적이고

미시적인 변수를 통해 북한 연구가 진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실리’와 ‘경제성’을 강조한다고 젊은 세대의 통일 및 대북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박근혜 정부 시기를 예로 들며, “당시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강조하고, 보수언론에서 경제적 내용을 부각한 ‘통일이 미래다’ 등의 시리즈를 선보였지만 국민 여론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 논의는 정부 정책의 진정성, 사회적 합의 등이 높아질 때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좌담회를 주관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한 만큼 정부와 각계각층의 포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전후로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4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연구성과



권금상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남북한 미디어의 탈북인/탈북탈남인 서사:
미디어가 구성하는 분단의 현재성과 윤리.
《통일인문학》 제 73집 (2018)

이 연구는 탈북인 임지현의 재입북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 미디어의 탈북인/탈남탈북인 서사를 분석하여 두 나라의 미디어가 구성하는 분단의 현재성을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들의 서사는 현재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분단현실에서 통합과 갈등 확산의 전달력을 갖는다. 서사분석을 위해 남한의 미디어는 탈북인을 주인공으로 다룬 종합편성채널의 TV프로그램과 탈북인 및 탈북탈남인을 주제로 다룬 언론매체를 분석한다. 북한의 미디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와 우리민족끼리TV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남한 미디어에서는 탈북인을 ‘인정의 대상’과 ‘잠재적 범죄자’로,

탈북탈남인은 ‘범죄자’로 서사화되고 있다. 북한미디어는 탈북인을 ‘유인납치 되어 송환되어야 할 공민’으로, 탈북탈남인은 ‘돌아와 용서받은 배신자’로 서사화한다. 재현방식에서 남한은 주로 예능형식과 언론의 범죄관련 기사로, 북한은 논설이나 간담회 형식의 총화내용으로 구성하여 양 국가의 미디어는 대중적인 확산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분단체제에서 탈북인/탈북탈남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남북한 미디어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기존 틀로부터 경계긋기와 윤리적 성찰을 제언한다.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이상화 교육의 전략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 21권 제 1호 (2018)

북한의 교육은 국가가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를 결과로 요청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 다양한 외장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체제 안정에 이상화 교육 전략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2013년부터 새롭게 편찬된 북한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상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연구는 의도적인 이상화의 전략을 통해 교육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 교육에서 이상화는 타고난 천품을 인식시키고 흠모와 충성을 강요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형성한다.

실천능력은 영상을 정확히 찾는 능력, 정중히 말하고 쓰는 능력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이상화 교육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의 반복성과 타고난 천품 및 혈통이다. 둘째, 구성의 불균형이다. 이는 혁명적 가정과의 연관성이 미비하고 생애 주기별 구성이 고르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차별성이다. 김정은의 무법의 특출한 재간과 후계자로서의 역량 과시가 그것이다.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의 공백은 김정은 정권의 이상화 교육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연구단 동정

▼ 4월 5일(목)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센터의 공동학술회의(주제: “환대의 마음: 공생과 통합의 문화정치학적 탐색”)가 개최되었습니다.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된 학문후속세대 세션과 한양대 평화연구소, SSK남북한마음통합센터 주관의 두 세션으로 구성된 본 학술회의에서, 사업단 소속 박세진(북한대학원대학교, “마음의 ‘사회학’의 곤혹스러움에 대하여”), 이하연(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 통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일 이후 독일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연구원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대의 실천과 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양대 평화연구소 세션에서는 평화연구소에서 개발한 ‘이주민 환대지수’ 지표체계와 국가 간 수치 비교에 대한 발표 등이 이루어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공동체 구성을 위한 ‘환대’와 ‘통합’에 관한 여러 유익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 4월 13일(금)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4월 정기 콜로키움이 실시되었습니다. 본 연구사업단에 신규 임용된 연구교수들의 발표로 이루어진 이번 콜로키움에서 채석진 박사는 “잔혹한 희망: 불안정한 삶, 노동, 그리고 디지털미디어”를 주제로, 엄현숙 박사는 “학교교육에 나타난 사회적 영웅주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 4월 19일(목)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한 마음통합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주제로 공동좌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난 2~3월에 걸쳐 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한 스포츠, 사회/문화 교류가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정부유관부처 및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본교 사회/문화 전임 교수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좌담회의 상세 내용은 전면의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인식 어떻게 변했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단 동정



▲ 4월 26일(목) KBS1TV 《명견만리》 프로그램에서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김성경 교수는, 군부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강 하구 주민들의 생활,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과 재일동포사회 등의 여러 차원에서 휴전 상황이 불러일으킨 한반도의 비극과 모순을 재조명하고, ‘일상 속 차별과 폭력의 극복,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 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KBS1TV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TV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험과 실천

■ 4월 12일(목), 서울시 정독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북촌인문학스터디(BOOK村인문학스터디)에서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분단된 마음은 어떻게 다시 만날까?”라는 주제 아래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김성경 교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북 여자축구 경기와 올해 열린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경기 참관 경험을 바탕으로 분단이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낸 경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 4월 21일(토), 본 연구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정기상영회(2회차)가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월 정기상영회에서는 다큐멘터리 “경계에서 꿈꾸는 집(Dream House by the Border, 감독: 김량)”의 상영과, 김량 감독과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를 초청한 GV가 진행되었습니다. 철원 통일촌 마을에 거주하는 12명의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로 이루어진 본 영화는, ‘오늘날 ‘경계’에 놓여있는 이들이 경험한 서사를 통하여 분단의 역사를 위로부터의 시선이 아닌 아래로부터 재구성’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일정

■ 5/8(화) 오전 10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North Korean Mobility and Transnational Network”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김성경 교수의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Roanoke College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5/11(금) 오후 4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5월 정기 콜로키움이 개최됩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영남대학교 주형일 교수를 초청하여 “68혁명과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에 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 5/18(금), 25(금) 오후 4시 본 연구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실시됩니다. 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에서는 18일(금)을 포함한 향후 3개월 동안 매 월 1회, 북한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도서 강독스터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금)에는 사업단 연구보조원들의 학위연구 주제 발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 상세 문의: 최종환, jhlove2412@naver.com)



68혁명과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주형일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2018. 05. 11 금요일 늦은4시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NRE

▲ 5/19(토) 오후 4시 30분, 본 연구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정기상영회(3회차)가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실시됩니다. 5월 정기상영회에서는 다큐멘터리 “나는 선무다(I Am Sun Mu, 감독: 아담 쇼버그)”의 상영과, 최순미 박사(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를 초청한 GV가 진행됩니다.

■ 6/1(금)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정치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정치정보학회를 비롯하여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4개의 회의 세션과 라운드테이블,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총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본 연구사업단에서는 오후 제3회의(13:00~15:00,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1호)에서 박주화(통일연구원, “정체성의 분화와 통일인식: 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을 중심으로”), 엄현숙(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의 대외커뮤니케이션 방식 연구: 조선신보를 중심으로”)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다만, 북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문수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건 맞지만, 지금은 정권이 시장을 이용하는 단계이지 아직 시장이 정권을 뒤흔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1인당 GDP가 5000달러 수준이 되면 사회주의·독재 정권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북한의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이다.

양문수, “北을 장악한 장마당, 김정은을 대화로 떠밀고 있다” / 조선일보 2018.04.02.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 안전을 교환하려 할 때, 북한은 체제 안전이 한미의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최소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남북미 평화공존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북한이 한미동맹을 인정하면 삼각모순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한미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형태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공존은 한미동맹의 수정과 조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정책 조합이다. 한국정부가 이 세 번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을 수정 또는 조정 또는 대체하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

구갑우,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은 공존할 수 없다?” / 프레시안 2018.04.10.

지금 상황을 ‘평창 임시평화 체제’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짚어볼 부분이 2017년 11월29일 북한이 고각 발사 형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 시험을 한 이후 과정이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11월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재지정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반응인데, 이전과 달리 한국과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12월19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를 제안했다. 일종의 반전이다. 대놓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국가에 대해 그 국가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아닌 선제적 협력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탄핵과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아) 평창겨울올림픽 기간에 박근혜 정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암담하다.

구갑우, “담대한 평화가 온다” / 한겨레21 2018.04.25.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과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남북한 사이에는 무엇을 비핵화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며 “이를 조율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어느 단계를 비핵화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추상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핵폐기 노력을 평가하고 인정함으로써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봉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우영, “북핵·ICBM 2년내 폐기 합의땀 대성공” / 한겨레 2018.04.25.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이우영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은 실패할 회담은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선언문이 3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디테일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쨌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남과 북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특별히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동식수 행사 때 공개된 식수 표지석에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란 문구로 서명이 새겨졌다. 이우영 교수는 “두 정상 이름과 직책으로 선언문을 시작했다는 것은 서로 쌍방 실체를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뜻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구”라고 말했다.

이우영, “정상회담 성과는 '최대치', 이제는 북미정상회담이다” / 미디어오늘 2018.04.27.

전문가들은 먼저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년 이후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교역, 개성공단사업 등이 잇따라 중단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도발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이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없잖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한 정부가 경험 사업에 재정을 직접 투입해 민간기업의 경험 사업에 개입하고 통제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심판의 역할을, 민간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기도.

양문수, “정경분리·민간 주도·국제사회 참여 '신 남북경협' 시대” / 한국일보 2018.04.27.

칼럼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선물’을 먼저 북한에 내밀었고, 북한은 대화 복귀와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답례’를 한 바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한-미 동맹이라는 한국 사회의 절대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 힘겨운 결단이었던 만큼 북한의 답례 의무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공연단의 공연에 깜짝 참석하면서 ‘공연을 직접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나, 북한 고위급의 입에서 나온 ‘사죄’라는 말로 미뤄볼 때 남북은 조금씩 서로를 인정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듯하다.

급변한 북한의 태도를 두고 ‘평화공세’라는 의심도 있고, 핵, 평화, 체제 인정 등의 고차방정식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선한 호의가 지금의 남북관계 대전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사실도 되새길 만하다. 만약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의 정교한 전략 준비 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할 것이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포틀래치의 교훈 / 한겨레 2018.04.04.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건축의 꿈, 국제정치의 꿈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김석철 (2005), 창비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건축학자 김석철의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이하 <한반도 프로젝트>)에서 펼쳐지는 도저한 상상력의 나라다:

역사의 흐름에는 결단의 시기가 있다. 중국 동부해안링크가 완성되기 전 황해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세계사의 흐름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 국가를 넘어선 도시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세계질서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국가가 등장한 17세기 이후 세계는 끝없는 분쟁과 전쟁의 와중에 빠졌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7천만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국가의 틀을 유지한 채 국가를 초월한 도시공동체가 이종나선과 같은 생명의 조직으로 국가간·도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길이 될 것이다.

건축의 꿈, 도시설계의 꿈이 국제정치의 꿈과 만나는 순간이다. <한반도 프로젝트>가 구상하는 ‘황해연합’-1단계 인천, 칭따오, 따렌의 도시연합과 공동해상공단, 2단계 한반도,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山東省)의 경제공동체, 3단계 중국 동부해안링크와 일본열도 서남해안링크를 더한 황해연합-은 EU와 NAFTA에 조응하는 동북아판 지역공동체이면서도, NAFTA와 EU와 달리 국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묶고자 한다. 즉 국가와 도시가 얽힌 21세기 국제정치경제의 생명의 DNA를 만들고자 하는 놀라운 “공간적 상상력”이다. 황해연합은, 국경이 사라진 세계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노래하는 존 레논의 ‘이미진’을 방불케 하는 21세기 평화기획이기도 하다. 황해연합은 세계시간을 선도하고자 한다.

건축과 도시설계에는 무지한 불온한 국제정치학도도 이 대담한 상상력에 경의를 표한다. 냉전하면 군비경쟁이나 핵억지를 떠올리는 국제정치학도에게 황해가 “봉쇄된 냉전의 바다”였고, 냉전으로 인해 “거대한 인프라”인 황해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지적은 새로운 발견으로 다가 온다. 인천과 칭따오와 따렌은 서구열강이 강제로 개항을 하고자 했던 도시들이었고, 그 도시들을 묶어 주던 황해는 서구열강의 전장(戰場)이기도 했다. 전장이었고 봉쇄된 바다였던 황해를 내해(內海)로 하는 도시공동체로서의 황해연합 구상은, 이천년 이상 지속되었던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의 교역과 교류를 복원하는 것인 동시에, 백낙청이 서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유럽 같은 국가연합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식

의 부질없는 담론에서 처음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황해연합의 단계론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국가만을 고려하면서 동북아니 동아시아니 동북아 중심이니 가교(架橋)니 하는 고색창연한 논쟁에 빠져 있는 정책결정자나 국제정치학자들은 도저히 설계할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경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온하기에 국제정치학도는 “50년을 내다본” 황해연합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해 보기도 한다. 의심해 보는 이유는, 황해연합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다. 굳이 국제정치이론을 들먹이자면, 황해연합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교류를 통해 기능망을 구축하여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기능주의적 발상이다. “도시야말로 초거대 기업이며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한반도 프로젝트>가 주목하는 것처럼, “현재 산둥성, 랴오닝성과 한반도의 교역은 전성기 때의 지중해공동체보다 크고 발틱해안 도시동맹보다 크다.” 따라서 황해도도시연합의 전 단계인 “한반도·랴오닝성·산둥성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반도 북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듯 보인다.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의 도시들이 포함된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남한만의 한반도도 아니고 한반도만의 한반도도 아니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한반도 북쪽이 황해연합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한반도 프로젝트>가 유럽연합의 모태로 생각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철강동맹’은 철강이라는 무기의 재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때, 비로소 기능주의적 접근은 그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황해를 자신의 바다로 생각하는 남북한과 중국이 안보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때, 또는 북한 핵문제로 불리는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이 해결을 위한 나름의 기제를 가지게 될 때, 또는 새로운 경로로 “한반도·랴오닝성·산둥성 경제공동체”가 동북아 차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설득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황해연합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들의 협력이 최소한이지만 제도화될 수 있을 때, 황해를 품고자 하는 도시들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프로젝트>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들의 연합이 ‘시민도시’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규범적 차원을 추가하고 싶다.

칼럼 연재

건축의 꿈이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꿈과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황해연합을 구성하는 도시들의 내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황해연합의 도시들이 도농공존(都農共存)을 실현하지 못하고 농촌의 황폐화를 수반하는 도시들로 구성된다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황해연합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프로젝트>는 이 근본적 질문을 비껴가지 않고 있다. 새만금과 행정수도가 황해연합과 연계되는 것을 보면서, 건축학이 공학이면서 예술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금 도저한 상상력을 보자:

'금강.새만금 어반클러스터(urban cluster)'는 행정수도 논란과 새만금 딜레마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금강을 주운(舟運)이 가능한 운하로 만들어 군산.부여.공주.대전을 금강유역 도시연합으로 만들고, 금강과 만경강을 신수로로 연결하여 금강유역과 새만금을 어반클러스터화하는 방안이다. 수도권과 경쟁하며 황해도도시연합의 유력한 경제권역이 되게 하려는 계획으로, 실행수도 논의는 이런 정도의 규모와 비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새만금 바다도시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될 것이다. 정치공약으로 시작되어 생겨난 1억3천만평의 안바다에 해상공단을 만들면 황해공동체 같은 바다중심의 경제공동체에서는 강력한 경쟁우위를 지닌 경제권역이 될 수 있다. 34km의 방조제로 바다를 완전히 막아 육지를 만들면 황해공동체의 변방이 되지만, 방조제를 다 막지 않고 안바다를 살려 내부에 필요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조성하면 갯벌도 바다도 육지도 모두 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경제권역과 직접 연계되는 합동공단을 만들어 호남평야가 중국 해안공단과 하나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